



섹슈얼리티와 좌파적 정치



▶ 관련 기사 4, 5, 6, 7면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6면

#미투 캠페인 열풍
성적 학대와 성폭력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을까

7면

트랜스젠더 논쟁
섹슈얼리티는
다양하다

4~5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한반도 긴장

3면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쟁점들

5면

해수부의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수습 은폐

8면

철도 노동자들
임금 삭감 저지
투쟁 시동

8면

부패의 화신 이명박, 구속할 이유 차고 넘친다

김지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이명박의 추악함이 또 한꺼풀 벗겨지고 있다. 이명박의 온갖 비리를 애써 덮던 박근혜 정부가 끌어내려 지고서 온갖 의혹들이 다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 국방장관 김관진은 댓글 공작 실적을 이명박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스’는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이다. 당시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이명박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명박이 외교부 등을 이용해 김경준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아닌 다스가 돈을 받아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사인>은 다스 자금 세탁 과정에 전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의 부패 종합세트인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도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 원이 투입됐는데 건설사들은 입찰 담합으로 안정적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에 총 29조 원을 투입했지만 수익은커녕 공사들의 부채 비율만 늘렸다. 이명박 측근들이 공기업 사장 자리에 앉아 이런 일을 수행했다. 전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은 소망교회를 다녔다. 전 광물공사 사장 김신중은 고려대 출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고, 전 가스공사 사장 주강

수는 현대그룹 출신이다.

이명박의 형 이상득을 비롯한 정치인·관료들이 자원외교랍시고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부 차관 박영준이 연루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CNK 주가 조작 사건은 자원외교로 누가 돈을 챙기는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자원외교는 기업들에게도 호재였다. 성공불용자 정책 덕분에 기업들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자원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융자금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었다. 2008~2012년 성공불용자 감면액은 1500억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SK이노베이션은 이 정책으로 386억 원을 감면받았다.

유엔 반부패협약은 뇌물수수, 횡령, 착복, 유용뿐 아니라 영향력행사, 직권남용, 부정축재도 부패 처벌 대상으로 꼽는다.

불만과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이명박은 전방위적으로 직권을 이용했다. YTN, KBS, MBC 등에 잇따라 낙하산 사장을 쫓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이명박이 먼저였다. 민간인 사찰로 애먼 이들이 고통을 받았다.

박근혜는 이렇게 부패 위에 올려진 국가를 물려받아 거대한 부패의 산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부패가 낱알이 밝혀지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이 박근혜, 이재용과 나란히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이명박의 자원외교도 부패의 온상이었다

합법적 정경유착

국가가 나서서 기업과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편 것도 정경유착이다. 횡령, 배임 등은 이 과정에서 생겨난다.

이명박은 취임 직후 “이제 [정부와 기업에] 협력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임기 내내 철저하게 친시장적 정책을 폈다. 종합 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세안’과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기업주들과 부자들은 수혜를

입었다. 그렇게 늘린 이윤의 일부를 기업주들과 국가 관련들이 나눠먹었다. 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찌들어갔다.

롯데는 2008년 계열사 46개, 총자산 43조 7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2년 각각 79개, 8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2007년 삼성이 벌어들인 돈은 8조 원 정도였지만, 2011년 순이익이 17조 5천억 원에 달했다. 2007년 순이익이

3조 원 정도였던 현대차 그룹은 2011년 17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

반면에 2010년 당시 노동소득분배율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59퍼센트)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가져가는 몫은 늘고,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든 것이다. 노동자 파업을 공권력을 동원해 파괴한 것도 철저히 기업 이익에 유착한 결과였다.

부패의 뿌리

이명박의 부패 행태는 좀처럼 낫설지가 않다. 한국처럼 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을 이끈 국가에서 국가와 자본의 융합은 매우 노골적이다. 부패는 남한의 탄생부터 시작됐다. “부정축재자 처단”은 4·19혁명의 주요 요구였다. 박정희는 환율을 조절해 국내 자본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눌러 자본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

은행을 국유화해 금융을 장악하고 대기업들에게 온갖 금융 특혜를 줬다. 세금과 관세 면제 혹은 감면도 그런 특혜의 일부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이런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고 기업들은 그 대가로 엄청난 양의 돈을 정부에 갚다 바쳤다.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을 보내 돈을 빼내는 것도 두 정권의 축재 수단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고 박근혜는 부패가 드러나 결국 정권에서 쫓겨났다.

부패는 단지 후발 자본주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엔론 사태나 독일의 지멘스 뇌물 사건 등이 대표적 예다.

이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속성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과 지출은 자본가들에게 자본 축적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다른 자본과의 경쟁 때문에 개별 자본가들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정책이나 성장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

런 공적 결정 권한은 아주 소수에게 집중돼 있고, 이 때문에 국가 관료들과의 유착은 자본가들에게 사활적이다.

국가 운영의 비용과 위상이 자국의 자본 성장에 달려 있는 국가 관료들에게 자본가들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자본가들의 이해를 근본에서 결코 거스르지 않는다. 법원은 흔히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국회는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

자본주의 법률로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 은행과의 유착, 국가에 의존하는

자본의 속성 자체를 없앨 수 없다.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지만 삼성은 여전히 차명계좌로 5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

국가와 자본의 구조적 상호의존 자체를 끊지 않는 한 부패의 사슬은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관계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근본적 이해 관계를 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지배자들은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한 달 넘게 파업 중인 을지병원 노동자들

당장 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대전과 서울의 을지병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 중이다. 병상 가동율이 3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터무니없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며 막가파식 흡집내기라고 노조를 비난한다. 그러나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인력은 각각 타사립대학 병원의 60퍼센트, 70퍼센트에 불과하다. 언론 인터뷰에서 사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측은 현재 월 4만 7000원인 식대

를 2년에 걸쳐 5만 원만 인상해 주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연봉에서 떼서 주는 명목상 명절 수당이 아니라 실질적인 명절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까지 타사립대학 병원의 임금 수준으로 맞추라’고 이미 권고했다. 사측은 이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 아니나다를까 최근 사측은 매출과 임금을 연동시키겠다고 말을 바꿨다. 을지재단은 단결해 싸우는 대전과 서울의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분리 교섭

을 시도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을지병원은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부서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게 한 의료법을 위반해 몇 달 전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그러고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당장 전환하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성심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의 갑질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는데 을지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을지병원은 올해 6월, 서울 지하철 하계역에 을지병원 이름을 표기하려고 약 1억 7천만 원이나 쓴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

동조건 개선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휠체어, 수술용 가위, 체온계 등 병원 내 비용을 간호사들이 돈을 모아 사도록 하거나 개인 사비로 부담하게 했다. 이동식 밥차에 부딪쳐 코뼈가 부러진 간호사가 산재 신청도 못 하게 막고, 비번인 날에도 병동 청소와 환경미화를 강요했다. 임신한 뒤 명절과 일요일 새벽 2, 3시에도 병원에서 부르면 달려가야 했다”대전 을지병원의 한 간호사는 “병원 내 갑질문화 현장증언 및 긴급 대책 회의”에서 “만삭의 몸에도, 명절과 일요일 새벽 두 세시에도, 병원

이 부르면 달려가야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병원에서 ‘동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못 하게 압박했다. 이 끔찍한 직장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성토했다.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을지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대 병원인 을지대병원을, 다른 병원에서는 모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병원으로 여긴다고 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이직율이 높다. 을지병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은 긴장 더 높일 것

김영익

11월 20일 미국 정부는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 때문에 시진핑은 체면을 구겼다)을 지켜본 후 바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과 함께 이란·수단·시리아 4개국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미 간 물밑 접촉으로 국면이 전환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 쪽으로 물꼬를 트려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기대를 여지없이 깨 버렸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트럼프가 당분간 대북 대화 재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두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살인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하지만 그 정권에 국제 테러리즘 지원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터무니없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량 국가’의 평상시 지도부인 트럼프 정부가 ‘테러지원국’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수천 명이 희생된 필리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을 칭찬하는 트럼프가 말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북한이 이미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 자체는 실효성이 적은 조치일 수 있다.

북·미 간 물밑 접촉으로 국면이 전환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기대를 여지없이 깨 버렸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지정은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에 걸맞은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다. 앞서 미국 항공모함 3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을 눈여겨봐야 하는 까닭이다.

재무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21일 미국 재무부는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새로 추가된 제재 리스트에는 북한 선박과 운송 회사들 외에 중국 기업인과 무역회사 4곳이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 기업들을 주된 타겟으로 삼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포함된 데서 보듯이, 북핵 문제는 미·중 갈등과 긴밀히 얽혀 있다.

11월 초 트럼프·시진핑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화기에애해 보였지만, 정상회담 후 미국과 중국은 다시 충돌하기 시작했다. 10일 트럼프는 베트남 아펙(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재천명하며 “만성적 교역 악폐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주된 대상이 중국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편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세계화를 옹호하며 세계화에서 후퇴하는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메우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은 아펙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FTAAP의 구체적 실행 방향 합의는 미국의 반대로 불발됐다.

일본 아베 정권은 트럼프의 강경 대북 정책을 계기로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려고 한다. 북한 ‘위협’을 이유로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 개발을 검토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다. 그 순항 미사일은 틀림없이 중국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비롯한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 조치들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면서 동북아시아 불안정을 더 키울 것이다. 또한 미·중 갈등의 악화가 트럼프의 강경한 대북 정책과 맞물리며 이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11월 7일 광화문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문재인 식 “균형외교”는 어디로 가는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기 구입’이라는 ‘젓병’을 물려 놓고 ‘3NO’(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음)에 대한 양해를 받은 것”이 성과라는 것이다. 즉, 문재인이 11월 초의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균형외교의 디딤돌”을 놓았다고 한다.

실제로 문재인은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일본과는 동맹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에는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은 없다(3NO)고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나름의 ‘균형외교’를 시도하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그간 중국 경제의 성장에 의존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그럭저럭 버텨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 ‘균형외교’가 외교 쟁점으로 떠오를 듯하자,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아, 이기시감! 노무현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폈다가 신속히 꼬리를 내렸다.)

미국은 한국의 ‘균형’ 시도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 아마 미국 지배자들은 한국이 균형을 시도할 감량이 있느냐며 내심 어이없어 할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와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유력한 빅터 차 등이 문재인인의 ‘3NO’ 선언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분간 좌충우돌하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마음은 균형외교이나 몸은 한·미·일 동맹’으로 기를 공산이 크다. 문재인 자신이 세계 시장을 누비는 한국 자본을 뒷받침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데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명박·박근혜 정

부 하에서 발전한 한·미·일 군사 협력 구조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지 않고 연장해 버렸다. 한·미·일 동맹을 위해 미국이 촉구해 성사됐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도 폐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지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강경 대북 정책에 호응할수록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균형’과는 멀어질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제대로 균형외교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대안이 못 된다. 남한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느냐 여부는 미·중이 제국주의적 상호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와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보·좌파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평화 운동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혁명적 좌파는 여기에 더해 반자본주의적·반제국주의적 노동계급 운동을 구축하려 애써야 한다.

원 간호사들의 근속년수는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중간경력자도 별로 없어 10년차 이상 간호사 비율이 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숙련도가 낮으면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한편, 파업은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학교가 되고 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첫 파업이라 두렵고 무서웠는데 빠짐없이 모두 나오는 걸 보면서 단결력도 높아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일 열리는 노조 집회에서 한 노동자는 “수동적으로 있다가 노조가 생기고 파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의 권리를

찾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한 나날”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지지와 연대가 커지고 있다. 11월 중순에는 서울 을지병원이 있는 노원 지역의 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이 모여 ‘을지병원 파업 승리를 위한 노원 지역대책위’(이하 노원지역대책위)를 꾸렸다. 노원지역대책위는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자회견, 집회,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노원지역대책위가 주최한 집회에는 주변 대학의 학생들도 참가

했다. 특히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연은정 씨의 발언은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큰 박수를 받았다.

“어머니가 경희의료원 간호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파김치였던 걸 기억하는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환자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동지들의 투쟁이 적극 지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 대폭 충원은 환자의 의로서비스와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심정

을 대변한 사이다 발언”이라며 속 시원해 했다. [발언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을지병원 노동자들은 이런 파업 지지 활동으로 큰 힘을 얻고 있다. 노원 지역대책위는 소속 노조와 단체들이 릴레이 지지 방문과 연대 발언 등 파업 지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북돋는 지지와 연대는 더욱 확산돼야 한다.

을지병원 사측은 당장 임금을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김은영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 ★ 근본주의적 페미니즘과 노동당 내분
- ★ 제국주의와 제1차세계대전 ① 왜 사라예보 총성은 전쟁의 신호탄이 됐는가
- ★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①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을까?
- ★ 논문 요약 소개 조셉 추나라의 ‘장기 불황의 정치경제학’

한서희-하리수 논쟁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하고 섹슈얼리티 다양성 인정해야

양효영

11월 11일, 연예인 지방생 한서희 씨(이하 효징 생략)가 자신의 SNS에 “트랜스젠더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페미니스트 선언을 한 한서희에게 일부 네티즌들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는 글도 써 달라고 부탁하자, 한서희가 이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 것이다.

한서희의 발언은 사회에서 지독한 차별과 냉대를 받아 온 트랜스젠더들에게 큰 상처를 줬을 것이다. 한서희는 한 트랜스젠더 네티즌에게 “주민번호 2나 4로 시작해요?”, “자궁이 없고 염색체가 다른데 어떻게 여자죠?” 하며

지독히 편협한 태도를 보였다. 당연히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분노했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는 즉시 한서희를 에둘러 비판하는 글을 SNS에 남겼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한서희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무시해 버렸다”며 “주민번호(알자리 숫자 관련), 성전환 수술에 대한 편협한 생각 등을 언급하는 등의 언행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리수의 비판은 정당하다. 한서희는 트랜스여성들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으며 살기 위해 분투하는 현실을 간단히 비웃으며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강그리 무시했다. 자궁이 없고 XX 염색체가 아니면 손가락질 받고 차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트랜스여성도 여성이다” 2017년 미국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천대를 직시해야 한다

한국에서 성별 정정이 법적으로 인정된 지 11년째이지만, 성별 정정 기준은 여전히 매우 까다롭다. 대법원 예규는 명시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을 것, 외과수술을 통해 생식기를 제거할 것, 자녀가 없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부 법원이 성기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인정했지만, 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탈의한 전신 사진,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정 결정이 날 때까지 1~2년의 긴 기간을 견뎌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비용은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은 막대한 의료 비용을 버느라 허덕여야 한다.

까다로운 요건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인 성별 정정을 흔히 포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별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트랜스젠더들을 고��스럽게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불일치는 고용 문제에서 커다란 장벽이다. 성별을 이유로 한 사용자들의 비아냥과 퇴직 압력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201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트랜스젠더의 64퍼센트가 직장에서 한 가지 이상의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심지어 휴대전화 등의 가입과 변경, 보험 가입·상당, 투표 참가도 포기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별을 없애고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정정 요건 완화, 성전환에 대한 의료 보장,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기입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트랜스여성들은 성소수자 혐오와 여성 차별이 결합돼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다. 하리수는 언젠가 화장품 광고를 찍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목욕이 합성돼 들어간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매우 충격을 받고 슬펐다고 밝힌 적 있다. 하리수가

트랜스젠더임을 홍보거리로 만들어 흥행을 노리려고 한 광고업체의 짓이었다. 체계적인 트랜스젠더 배제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자살률이 매우 높고, 쉽게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된다.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고통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고 표현할 권리를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

트랜스젠더가 성별 규범을 강화한다?

한서희는 또한 자신은 성소수자 혐오자가 아니고 단지 트랜스젠더만 표용하지 못할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 [트랜스여성]의 여성상이 애교 섞인 말투와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손짓과 행동이 여성스럽게 보아야 할 등 우리가 벗으려고 하는 코르셋들을 조이고 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의 권리 주장은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퇴보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가 성별 규범을 강화해 여성 차별을 강화한다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견해를 드러낸다. 국제적으로 적잖은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논리로 트랜스젠더를 배척한다.

그러나 트랜스여성들이 주류적 여성상에 부합하여 애쓰다(한서희의 편견과 달

리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고 해서 이를 이유로 트랜스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라는 것은 페미니스트라면 거의 상식이다. 이런 원칙을 왜 트랜스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 트랜스젠더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성별 고정관념에 충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된다는 성별 고정관념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요되는 여성성/남성성 같은 성별 고정관념은 단지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 성교육에서부터 노동자들의 컴퍼니웨어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반에서 체계적으로 부추겨지는 것이다. 기존 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자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이 얼마나 될까(연예인 지방생인 한서희 자신을 포함해)? 트랜스젠더가 아닌 여성들 중에서도 주류적 여성상에 부합하려는 여성은 매우 많다.(대부분이 많은 적든 그런 관념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한서희의 주장은 주류적 여성상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할 뿐이다. 논쟁이 계속되자 한서희는 “페미니스트의 길은 자기가 어떤 길을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며 “본인과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짓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한서희야말로 트랜스젠더에 대해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짓지 않는다.

결국 한서희의 편협한 태도는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성적 다양성을 생물학으로 환원하는 결정론에서 비롯한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 성과 얼마간 관련 있지만 그것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성 역할, 규범 등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자신의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는 인류 역사상 내내 존재했고, 이것이 어떤 시기와 지역에는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성별 전환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별 이분법을 뛰어넘는 다양한 젠더도 인정됐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혹은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인” 같은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는 용어(“two-spirit”)를 가지고 있었다. 130곳이 넘는 부족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양한 젠더의 개인들은 부족에서 삼당파, 선생님, 치자 옷을 입고 남자로 산 여성이 있었다.



2017년 퀴어문화축제 부스에 걸린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의 걸개

비난의 화살을 계급사회와 그 지배자들에게 돌려야 한다

트랜스젠더 활동가이자 레즈비언,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레슬리 페인버그는 계급사회가 등장해 여성 차별이 발전하면서 더 엄격한 성 역할과 성별 범주의 협소화가 강화됐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난도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정착 생활과 농업이 발전하면서 무거운 장기를 다룰 수 있는 남성들이 생산을 주되게 담당하게 됐고, 사회의 잉여 생산물과 국가에 대한 통제는 남성이 맡게 됐다. 또한 일부 남성들이 잉여 생산물을 전유하는 지배계급이 되면서,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작가를 밝혀 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남성이 우위를 점하는 배타적인 가족

이 발전했고, 이 속에서 여성의 성적 자유는 옥죄어졌다.

이처럼 사회가 계급으로 나뉘면서 배타적인 가족제도가 발전했고 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 차별로 이어졌다. 이렇게 성 역할과 성별 규정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면서 다양한 성적 표현과 행위들도 백안시되고 억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배계급은 남성이 여성 역할을 하거나,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역겹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1530년,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한 스페인 정복자는 원주민 중 “가장 용감하게 싸운 자는 여성스러운 남성이었다. 그 이유로 나는 그를 화형시켰다”고 황실에 보고했다.

여성해방과 트랜스젠더 해방은 연결돼 있다

여성 차별과 트랜스젠더 차별은 서로 상관없지는커녕, 계급 사회라는 차별의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와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상호배타적인 게 아니라 한 쪽의 권리가 침해되면 다른 쪽의 권리도 결국 침해받게 된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부와 특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신체의 차이나 성적 지향, 출신급 등 중요치 않은 차이들을 이용해 피지배자들을 분열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과 트랜스젠더 차별은 서로 연결돼 있다. 가족제도는 여전히 지배계급에 중요한 기구다. 가족은 노동력 재생산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 가정 내 여성의 무보수 노동은 지배계급에 막대한 비용을 아껴준다. 이를 위해 지배계급은 고정된 성 역할이 마치 남성과 여성의 본성인 것처럼 설파한다. 사람들은 이분법적 성별 규범이라는 틀에 옥여넣어 지고, 여기서 고통받는 것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대다수 평범한 대중이다.

즉, 우리의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자들인 지배자들이다. 따라서 비난의 화살은 체제와 지배계급에 돌려야지, 트랜스젠더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한서희 식의 생물학적 결정론이 야말로 사람들의 다양한 자기 표현을 억누르고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할 가능성들을 좁혀서, 여성의 평등과 해방에 해롭다.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별 고정관념에 반대하며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자유로운 섹슈얼리티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여성해방은 트랜스젠더 해방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 이 글의 후반부는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로라 마일즈(Laura Miles)의 선구적 연구 ‘Transgender oppression and resistance’, International Socialism 141호(2014)에 많이 빚졌다.

후보간 TV토론으로 본 민주노총 임원선거 쟁점들

김하영

민주노총 임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꼭 2주가 된 지난 11월 19일 TV토론이 열렸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선거의 단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좌-중-우 구도가 자리잡았다. 2번 이호동 후보조가 투쟁 우선과 노정 대화, 1번 김명환 후보조와 4번 조상수 후보조가 노사정위 아닌 새로운 틀로 사회적 대화 참여, 3번 윤해모 후보조가 노사정위 복귀 입장이다. 이날 TV토론에서도 이 구도가 재확인됐다.

신8자회의 vs 사안별 노사정 대화

3번 윤해모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등장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며 시종일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현안 해결”을 주된 쟁점을 제시했다. 또, 자회사들을 통한 정규직화 방안을 “꼼수”라고 비판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환 후보의 이런 비판은 조상수의 타이밍을 놓치고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어먹은 뒤 투쟁을 시작하면, 스스로 불리한 처지로 몰아넣는 격이어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러고는 조합원들을 탓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4번 조상수 후보와 1번 김명환 후보는 정책과 비전이 비슷하다는 반응이 많아서인지 서로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애썼다. 특히, 조상수 후보 측이 토론 전략을 그렇게 짠 듯했다.

4번 조상수 후보는 최근 1번 김명환 후보 측이 제안한 ‘신8자회의’를 비판했다. ‘신8자회의’ 제안은 노사정위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8자(노동 대표 2인, 사측 대표 2인, 정부 대표 2인, 대통령, 국회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회의와 매우 흡사하다.

그렇게 되면 8자 중에 민주노총 몫은 1에 불과할 것이다. 조상수 후보는 이런 점은 비판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국회를 끌어들이면 논의를 어렵게 할 뿐”이라며 “노사정 대표자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사안별 사회적 대화”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팀이 1번 김명환 후보 조보다 사회적 대화 성사를 위한 더 빠르고 현실적인 길을 제시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전에 없던 방법이 아니다. 12년 전(2005년)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노사정위 복귀 반대가 중론인 상황에서 그것을 우회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비정규직임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문제점은 노적 성별 규범이라는 틀에 옥여넣어 지고, 여기서 고통받는 것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대다수 평범한 대중이다.

그러나 당시 비정규직임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문제점은 노



11월 19일에 열린 민주노총 임원 선거 TV토론회

사정위의 경우와 하등 다를 바 없었다. 4번 조상수 후보가 사회적 대화의 조기 추진을 변별점으로 제시했다면, 1번 김명환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보다는 투쟁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자신의 ‘신8자회의’ 제안이 너무 온건한 인상을 줬 중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인 지도 모른다. 그는 최저임금 1만 원 조 기 실현이나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본부 설립 등을 제시했다. 또, 자회사들을 통한 정규직화 방안을 “꼼수”라고 비판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환 후보의 이런 비판은 조상수의 타이밍을 놓치고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어먹은 뒤 투쟁을 시작하면, 스스로 불리한 처지로 몰아넣는 격이어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러고는 조합원들을 탓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4번 조상수 후보와 1번 김명환 후보는 정책과 비전이 비슷하다는 반응이 많아서인지 서로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애썼다. 특히, 조상수 후보 측이 토론 전략을 그렇게 짠 듯했다.

4번 조상수 후보는 최근 1번 김명환 후보 측이 제안한 ‘신8자회의’를 비판했다. ‘신8자회의’ 제안은 노사정위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8자(노동 대표 2인, 사측 대표 2인, 정부 대표 2인, 대통령, 국회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회의와 매우 흡사하다.

그렇게 되면 8자 중에 민주노총 몫은 1에 불과할 것이다. 조상수 후보는 이런 점은 비판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국회를 끌어들이면 논의를 어렵게 할 뿐”이라며 “노사정 대표자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사안별 사회적 대화”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팀이 1번 김명환 후보 조보다 사회적 대화 성사를 위한 더 빠르고 현실적인 길을 제시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전에 없던 방법이 아니다. 12년 전(2005년)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노사정위 복귀 반대가 중론인 상황에서 그것을 우회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비정규직임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문제점은 노

그 자체가 변별점이 되기는 어렵다. 남는 문제는 정치세력화 추진 자체일 것이다. ‘정치세력화 반대’라고 주장하면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일까 봐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이겠지만 말이다.

이 쟁점은 노동조합 상층기구인 총연맹의 구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 ‘사회세력화’ 주장은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세력으로 기능하게 만들자는 것으로, 민주노총이 투쟁을 이끌기보다는 전문 역량을 길러 정책 제안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조상수 후보는 비정규직 조직화에서 민주노총의 과제는 “공중전”(사회정치 정쟁화)이라고 말해 이런 전망을 엿뵈 드러냈다.

조상수 후보는 또한 복핵 문제를 김명환 후보와의 변별점으로 삼고자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김명환 후보의 설명을 듣고는, “북한의 핵 개발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짚고 넘어갔다.

그러나 복핵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면 서도 복핵 반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운동 건설이 불가피함을 조상수 후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강력한 평화운동 건설에 이바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4번 조상수 후보와 1번 김명환 후보는 사회적 대화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또, 두 후보가 모두 사회적 대화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양보를 내놓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4번 조상수 후보는 노동시간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노사정의 책임과 역할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1번 김명환 후보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전에 없던 방법이 아니다. 12년 전(2005년)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노사정위 복귀 반대가 중론인 상황에서 그것을 우회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비정규직임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문제점은 노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전에 없던 방법이 아니다. 12년 전(2005년)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노사정위 복귀 반대가 중론인 상황에서 그것을 우회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비정규직임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문제점은 노

노동자 조직의 성장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의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 상급기구들의 용기와 자신감이 더욱 얹어져 가는 이때,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투쟁적·급진적 조합원들은 좌파적 노조 지도부의 좀 덜 구체적인 정치적 전망과 지향을 그들의 대중 투쟁으로 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좌파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전망과 지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노동조합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최미진

한샘과 현대카드 여성 노동자들의 폭로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하 직장 내 성희롱으로통칭)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공감과 분노가 크다. LG생활건강, 코레일관광개발 노조에서는 관리자의 성희롱 문제 해결이 최근 파업의 주요 요구의 하나였다. 간호사들에게 섹시 댄스 연습을 강요한 성심병원의 성차별적 갑질도 노동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한샘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단체들의 상담 통계에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성희롱 실태조사'(2015년)를 보면, 여성 노동자의 9.6퍼센트가 성희롱을 겪는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작업장"만 대상으로 한 조사인 데다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솔직한 답변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성희롱 경험률은 더 높을 것이다. 가령 민주노총이 의뢰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2011년 8월)를 보면, 최근 2년간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 경험률은 39.4퍼센트나 됐다. 경력 3~5년차의 경우에는 49.2퍼센트나 됐다.

직장 내 성희롱은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의 한 단면인 동시에,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근무 의욕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존감을 해치고, 심한 경우 견디다 못해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노동자들도 많다.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후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하자 비통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그저 예민한 여성의 과민반응 취급을 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전히 성희롱 문제제기와 그 해결은 매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78.5퍼센트가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50.6퍼센트). '업무 및 인사사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봐',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도 34퍼센트가량 됐다.

이처럼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해결 절차를 불신한다. 노동계급의 경험에서 비롯한 당연한 불신이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대부분이 사장이거나 고위 임원,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사측은 흔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참고 넘어가라고 압박·회유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한다. 또, 성희롱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돼 이윤에 손실을 입을까 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은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의 한 단면이자, 중요한 노동 조건 문제다. 2015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 여성노동자대회

성희롱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

어렵사리 문제 제기해도 되레 '말썽 일으키는 여성', '꽃뱀' 따위로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더 나아가 업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희롱 문제 제기는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한샘 사건에서도 피해호소 여성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회사측 담당자는 직장 상사가 성폭력을 했다고 호소한 노동자에게 고소 취하를 압박하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비열하게도 성희롱을 하고 강간까지 하려했다. 해고 협박이 뒤따른 것은 물론이다.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문제 제기를 불이익 조치로 짓누른 악덕 사용자의 전형이었다. 집단 따돌림, 업무 배제, 저성과자 유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보복이 가해졌다. 피해

자를 도운 노동자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졌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남도학숙의 여성 노동자도 성희롱 문제 제기를 한 뒤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관련 기사: 본지 174호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성희롱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정면 위배되는데도, 해당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검찰과 노동부는 4년째 르노삼성 사측을 처벌하지 않아 피해 여성 노동자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남도학숙 사측의 불이익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1퍼센트에 그쳤고, 실제 기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기소율 0.1퍼센트).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다행히 최근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골자는 성희롱에 대한 기업주 의무 강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벌금 인상)다. 여성·노동단체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싸워 온 덕분이다.

하지만 기업주 의무를 강화한 법·제도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성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이 생긴 지 18년이 됐고 법제도 개선도 있었지만,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성희롱을 당하

고 있다. 기업주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왔다.

기업주들이 여성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한, 피해 여성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커다란 결단을 요구할 것이다.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과 끈끈한 것도 높다란 현실적 장벽이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의 고통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걱정하곤 한다. 관리감독 부실이 개선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에게는 (특히 미조직 노동자) 법에 호소하는 것밖에 달리 기댈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송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두루 알듯이 이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린다. 설사 성공한다 해도 일 자리를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직장 내 성희롱을 노동조합의 쟁점으로

기업주들을 확실히 압박하고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를 사측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이 성희롱 근절을 자신의 주된 쟁점 중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이 동참하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항의 행동은 기업주에게 실질적 압박을 줄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지와 연대 속에서 싸울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관련 기사: 본지 166호,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여성 노동자의 조건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졌다.

여성 노동자들은 갈수록 노동계급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현재 44퍼센트가량으로,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여성 노동자들은 또한 자본주의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직종에 많이 종사한다 해서, 자본가들에게 여성 노동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싸울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참고 넘길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차별의 일부이자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라는 인식이 노동계급 속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남녀 불문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노동조합이 적극 대처하도록 조직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의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조직과 함께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맞서 싸우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훌륭한 일이다. 2000년 롯데호텔 노조 파업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상사로부터 당한 성희롱 문제 해결에 노동조합원들이 함께 나선 경험이 있다. 또, 2011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당한 성희롱에 맞서 민주노총 조직이 동참해 복직과 산재 인정을 쟁취해 낸 사례가 있다. 그밖에도 많은 이런 사례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투쟁을 노동조합의 과제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덧붙이자면, 직급이 낮고 비정규직일수록 직장 내 성희롱을 더 많이 당하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비율도 더 낮다. 따라서 이런 부문을 더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에 맞서 문제 제기할 때 민주노총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우산이 돼 주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새로 나왔습니다

마르크스21 22호

2017년 9~10월호

특집: 트럼프 등장 이후 한반도 제국주의와 한반도 기획 경제 위기와 계급 투쟁 장기 불황의 정치경제학

특집II 러시아혁명 100주년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 현재와의 공명(共鳴) / 전 세계 민족해방운동을 고무한 러시아혁명 / 레닌의 《국가와 혁명》

값 11,000원

*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Tel 02-2265-6354 | Email bookmarx@naver.com

특집I 트럼프 등장 이후 한반도 제국주의와 한반도 기획 경제 위기와 계급 투쟁 장기 불황의 정치경제학

특집II 러시아혁명 100주년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 현재와의 공명(共鳴) / 전 세계 민족해방운동을 고무한 러시아혁명 / 레닌의 《국가와 혁명》

#미투 캠페인 열풍과 쏟아지는 성추문

어떻게 성적 학대와 성폭력을 끝장낼 수 있을까?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의 오랜 성추행·성폭력이 폭로된 이후 서구에서는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추가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비슷한 일을 일상적으로 겪었다고 SNS에 올리는 ‘미투 캠페인’이 이런 폭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새디 로빈슨**이 이 사회에 만연한 성적 학대와 성폭력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을지 살펴 본다.

10월, 할리우드의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여성들을 오랫동안 성추행·강간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여성 차별이 사회 중심부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이 와인스타인의 행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추악한 짓을 벌일 수 있었다.

피해 여성들은 와인스타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가 자신의 인생이 파괴할까 봐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과 소녀들은, 와인스타인이 저지른 것과 비슷한 성폭력 또는 성적 괴롭힘에 매우 흔하

게 시달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와인스타인의 성범죄가 폭로된 후 수많은 여성들이 “나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미로 SNS에 ‘#미투’라고 해서 태그를 달며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이 캠페인의 영향으로 웹사이트 ‘에브리데이 섹시즘’[“일상적인 여성차별”이라는 뜻]에는 여성들이 겪는 차별, 성적 괴롭힘, 성폭행 경험담이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온다.

한편 [영국] 의회 조사를 보면, 소녀와 젊은 여성 다수가 대학 등 학교에서 성적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다.

〈가디언〉 칼럼니스트 수전 무어는 이렇게 썼다. “성적 괴롭힘은 평생 한번 겪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의 삶에 항상 존재하는 배경과도 같다.”

안타깝게도 이는 남성 일반이 문제라는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글에서 무어는 이렇게 개탄했다. “이 모든 게 공모의 결과다. 이 모든 게 남성 특권이다. 이 모든 남성들이 귀를 틀어막는 것이 문제다.”

여성차별이 구조화된 사회

그러나 남성들이 문제의 원인일까? 만약 아니라면, 무엇이 원인일까?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일은 치졸한 짓이다. 그러나 여성을 강간·추행하는 남성은 전체의 소수에 불과함을 유념해야 한다.

#미투 게시글 중에는 여성이 성적 괴롭힘에 시달리는 현실에 자신도 역겨움을 느낀다고 밝히는 남성들의 글도 있다. 자신이 겪은 폭력에 대해 상세히 적은 남성들도 있다.

분명 어떤 남성은 여성을 끔찍한 방식으로 대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남성들에게 항상 도전해야 하고, 그들이 행동을 바꾸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하지만 그런 성적 괴롭힘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 때문이지, 생물학적 본성 탓이 아니다.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 사회에 구조화돼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은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다. 여성은 “유리 천장” 때문에 고위직 승진에 제약을 겪는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가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오늘날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더 큰 부담을 진다.

강간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압도 다수가 여성이며, 성적 괴롭힘은 너무나 만연하다.

여성차별적 태도는 여성에 대한 이런 구조적 여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쓰인다.

여성의 삶이 남성보다 덜 중요하다는 관점은 이 사회의 지배자들이 퍼뜨리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강간죄를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피해 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다가나 가혹한 구형 때문에 가해 남성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번번이 여성 대상 범죄를 경시한다. 여성의 낙태권을 제약하거나 가정 학대 피해자 보호 조처 법제화를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국회의원들도 (성별을 불문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폭력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데, 가장 최악의 폭력은 여김없이 이 사회의 지배자들이 자행한다. 정부는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가차 없이 밀어붙인다.

그들은 무장한 경찰력을 동원해 질서를 강요한다. 지배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또한, 여성은 성적 ‘물건’ 취급받는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태도 탓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미지가 넘쳐 난다.

여성의 몸을 부각하는 상품 광고들을 생각해 보라. 여성이 자신의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 쓰도록 부추기는 패션·미용·성형수술 산업도 생각해 보라.

여성들은 영화·신문·대중음악·TV 퀴즈쇼·드라마에서 그저 섹시한 물건인 양 취급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정형화된다.

여성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억압에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진실은 자본주의가 성을 소외시키고 왜곡해 왔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마치 사고팔거나 훔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진다. 이 모든 것이 여성을 상대로 폭력이 자행되는 기반이다.

여성차별은 남성의 본성인가?

지배자들은 남녀의 특정한 행동 방식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을 퍼뜨린다.

그리고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든 빈곤이든) 모든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린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회의 책임을 최대한 숨기려 한다.

하지만 여성차별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여성차별이 자연스러웠다면 태곳적부터 모든 곳에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학자들은 여성차별을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들로 이뤄진 사회를 여럿 연구해 왔다.

예컨대 인류학자 엘리너 리콕은 여

성차별이 없는 여러 사회에 관한 증거를 발견했다.

그중에는 캐나다 지역에서 수렵·채집하며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 나스카피족에 관한 것도 있다.

리콕은 나스카피 사회에 “경험 많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뤄진 원로들이 두루 함께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음을 발견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권위를 갖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리콕은 가족·사회계급·국가의 등장으로 여성차별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생산력이 발전해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지배계급이 된 집단이 잉여를 통제했다. 지배계급은 잉여를 물려줄 “정당한” 상속자를 찾아야 해서 여성의 성

을 더욱 감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무거운 농기계 도입, 가족 활용 등] 생산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 여성 노동보다 남성 노동이 더 중요하게 됐고, 여성은 주로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됐다.

가족은 체제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 세대 노동력을 생산하고, 현재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일을 무상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여성차별이 가족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대부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여성이 무엇을 입든 어디를 가든 YES는 YES이고, NO는 NO다” 영국에서 열린 성폭력 반대 시위

여성 해방과 혁명

계급이 없던 사회에서 여성은 열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런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에 기초했다. 이렇듯 여성차별이 언제나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혁명적 상황에서는 여성차별이 줄어들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혁명 이전에 여성은 남성의 재산으로 간주됐고, 농민 남성이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은 합법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으로 2월 혁명이 발발했다. 혁명으로 여성의 지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혼과 낙태가 합법이 됐다.

여성은 완전한 투표권을 쟁취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외에는 어디에서도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던 시절에 말이다. 혁명 정부는 동일 임금, 작업장에서의 동등한 권리, 출산 휴가 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공동 보육원, 공동 식당, 공동 세탁소 덕에 가사노동이 개별 여성의 몫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바뀌었다.

1919~1920년 페트로그라드 주민의 약 90퍼센트가 공동 식당을 이용했다.

최근 사례로는, 2011년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발발해, 여성과 남성이 [함

께] 거리 시위를 벌여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몰아낸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집트에서도 여성은 혁명을 추동한 파업과 혁명 그 자체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다. 이후 군부가 반격에 나서자 여성을 방어하기 위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집트인 혁명이 마히누르 엘마스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는 여성을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다.”

러시아와 이집트 둘 모두에서 잔인한 반혁명이 벌어져 여성들이 쟁취한 성과를 후퇴시켰다.

러시아에서는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결혼을 장려하고 합법적 낙태권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여성과 관련해 이처럼 변화가 급격하게 벌어진 것을 보면 여성차별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개별 남성들의 사고방식이나 생물학적 본성 탓도 아님을 보여 준다.

여성차별에 대한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체제의 책임을 면해주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이 사회의 지배자들이 아니라 같은 노동계급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은 남성이 여성차별로 이

득을 본다는 생각과 상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의 낙태권을 박탈한다고 남성의 처지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여성의 임금이 낮게 유지된다고 남성의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의 경험은 분명 서로 다르지만, 여성의 저임금과 노동계급의 분열로 이득을 보는 건 사용자들뿐이다.

노동계급 남성이 이 체제에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남성들의 처지도 끔찍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단적으로, 20~49세 영국 남성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자본주의는 평범한 남성과 여성을 도외시하는 체제이며, 여성차별은 그런 체제를 떠받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

즉, 노동계급 남녀가 자본주의와 여성 차별 모두를 끝장내기 위해 단결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여성차별은 계급 사회에서 발생했고, 인류 역사의 10퍼센트 미만 동안에만 존재했다. 여성차별은 사라질 수 있다. 여성차별을 낳는 이 체제를 끝장낸다면 말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77호 / 번역 김동욱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지지하자

이정원

최근 철도공사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임금 삭감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인건비가 부족해 올해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3.5퍼센트 인상조차 못 한다고 발뺌하고 있다. 심지어 기본급을 3.5퍼센트 올리려면 조정수당 5.4퍼센트 삭감에 동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인상분보다 삭감액이 커 총 임금은 결국 삭감된다. 올해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3.5퍼센트가 인상돼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깎자고 나오는 것이다.

사측은 올해 내내 인건비를 줄이는데 적극 나섰다. 일손이 부족한데도 노동자들의 초과근로, 휴일 근무를 억제했고, 교대 근무가 필요한 일부 업무를 일방적으로 일근 업무로 변경했다. 결국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사측은 '초과수당이 많아지면 기본급 인상이 어렵다'는 명분을 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 400여억 원을 줄였다. 그런데 사측은 또 660억 원가량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사측이 말하는 '인건비 부족'은 인력이 대거 늘어났거나 인건비에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철도노조가 증원돼야 한다고 추산하는 인력 규모가 6800명에 이를 정도로 인력은 부족하다.

책임 전가

그럼에도 인건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임금피크제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 함께 추진해 온 인건비 절감 정책 때문이다. 정부와 사측은 서류상 정원을 줄여 하루아침에 철도공사를 '인력 과다', '인건비 과다' 공공기관으로 만든 다음, 기준을 맞추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3만 2000명이었던 철도공사 정원을 무려 5115명 줄여 '인력 초과 상태'로 규정하고는, 새로운 정원 기준에 맞춰 인원을 감축하기 시작했다.(철도에 비정규 노동자가 9000여 명에 이르게 된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정원 규정을 더 세밀하게 적용하며 임금 삭감을 밀어붙였다. 상대적 고임금인 3급, 4급 직급에서 '정원 초과' 인원들의 인건비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다. 올해도 이 정책의 여파로 300억 원이 서류상 '초과 비

용'이 됐다. 이것이 올해 사측이 임금 인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예산 사용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노조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할 때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정년 연장자의 임금(대폭 삭감된 액수일지라도)은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시행단계에서는 총인건비를 평년 수준의 인상률 정도만 증액하고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것이다. 당연히 실제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인건비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도 총인건비에서 임금피크제 인건비 186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결국 인건비 부족분 660억 원이 생긴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이처럼 철도공사는 올해 내내 윗돌 빼서 아랫돌 고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고기를 반복하며 '둘러 막기'를 하다가 이제는 답이 없다며 배째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벌어진 인건비 부족 사태는 철도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에서도 이런 문제가 벌어져 초과근로 억제와 연가 사용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그런데 철도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가장 많은 기관(2017년 3사분기 기준 873명)이라 예산 부족이 도드라진 것이다.

공공기관이 총인건비를 초과해 집행하면 기재부는 경영평가와 다음 해 예산 편성 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며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유지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은 아ям야금

삭감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나머지 직원들의 인건비를 뺏아서 임금피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투쟁도 조직해 보지 않고 임금피크제에 합의해 준 것이 큰 문제였음이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강요가 매우 강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당시에도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연장된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었다.

11월 17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만난 철도노조 지부장들은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주장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임금 삭감 시도가 단지 올해만 벌어질 문제가 아니므로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임금 삭감 저지"를 내걸고 11월 30일부터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부당한 정책을 강요하고 버티는 기재부 규탄 집회와 전국 철도 노동자 결의 대회도 예정하고 있다.

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빼앗긴 권리 회복(근속승진제 부활, 임금피크제 폐지, 후생복지 확충),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의 중요한 요구를 쟁취해 가자며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는 호소는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본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1시 43분 본지가 온라인으로 단독 보도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추가로 발견해 놓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16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 수습본부는 17일 오전 11시 30분 경 선체 진흙 세척 과정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런데도 미수습자 장례식이 진행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수습자 가족은 물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수습본부 부분부장 김현태는 "내가 책임질 테니 선체조사위원회, 미수습

자 가족, 유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다수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해수부 수습본부장 이철조, 수습반장 김철홍 등도 유골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도 모두 함구한 채 미수습자 장례식에까지 참석했다.

현재 미수습자 9명 중 5명의 뼈 일부만 발견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뺏조각 하나라도 찾겠다며 1300일 넘게 기다려 온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추가 유골 발견 사실을 숨긴 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빼앗은 격이나 다름없는 잔인한 짓이다.

뼈가 추가로 발견된 것도 모르고 찾지 못한 자식을 가슴에 묻으며 고통스러운 장례식을 치러야 했던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정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

박근혜 정부 때나 봤을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무리 봐도 장례식을 끝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싸움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이 사실을 은폐했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습본부가 해수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승주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의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